

미·이란, 제네바서 핵협상 원칙 합의...최종 타결은 미지수

군사 긴장 속 '기본 원칙' 전반 합의...초안 교환 뒤 3차 회담 조율 제재 완화·우라늄 농축 중단·IAEA 검증 방식 놓고 막판 이견 지속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 협상에서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s)'에 전반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에는 이르지 못해, 양측은 초안 교환 뒤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제네바의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약 3시간 30분간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6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 지 11일 만이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윌코프와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오만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간접 방식으로 협상을 벌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종료 뒤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이를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여러 지침 원칙에 대한 전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원칙에 따라 잠재적 합의문 초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진전이 곧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차기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측이 초안을 교환한 이후 3차 회담 날짜를 조율할 방침이다.

미국 측도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이 "어떤 면에서는 잘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이란이 아직 명확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적 옵션이든 다른 옵션이든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필요할 경우 군사적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

통령 역시 전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의 결과를 이란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도 강경 발언으로 맞섰다.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연설에서 "미국은 47년간 이란을 파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이를 검증하려는 어떤 절차에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열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하며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수 시간 봉쇄했다. 실사격 훈련과 미사일 발사도 병행됐다. 이는 중동 해역에 미국 핵항공모함이 전개되는 등 미군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대통령 명령이 내려질 경우 수주간 대이란 작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 의제는 제재 완화와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최근 3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과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란은 전문가급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무력 충돌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상호 불신과 '레드라인'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글로벌 안보 지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초안 교환과 3차 협상에서 구체적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이 병행되는 '벼랑 끝 협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국과 이란 핵협상 진행 중인 스위스 제네바 주재 오만 대사관저. /연합뉴스

일본, 무기수출 빚장 푸나...제3국 판매 검토

공동개발품 수출 확대 추진... '방위장비 지침' 개정 검토 공격용 드론 첫 도입 맞물리며 평화헌법 위배 논란 확산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이 아닌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무기의 경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만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판로가 급격히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이다.

아울러 실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할 때는 각 의(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와는 별개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개최해 7월 17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국회 기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 용도 규정을 없앨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정부가 무기 수출을 결정하면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이 신문은 "현재의 무기 수출 과정에는 국회 관여 체계가 없고 정부 내에서 일련의 절차가 완결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회 사후 보고'를 일종의 제어책으로 제시하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시된다고 해설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형식상 이야기로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장비청은 공격용 무인기(드론) 입찰을 전날 실시해 호주제 기종을 낙찰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호주 디펜드텍스의 '드론 40' 약 310대를 36억8016만엔(약 348억원)에 구입할 계획이다. 납기는 내년 5월 말이다. 입찰에 앞서 진행된 실증 시험에는 이스라엘 제품도 등장했으나, 이 제품은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이 공격용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신문이 전했다.

헌법학 연구자인 기요스에 아이사 무로라공업대학원 교수는 "공격용 드론은 세계 분쟁 지역에서 시민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본이 위협한 무기를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후원 중단하라"...美 챗GPT 불매 운동 70만명 보이콧 선언... '헐크' 배우 마크 러팔로도 동참

미국에서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유료 구독을 취소하는 '쿼트GPT'(QuitGPT)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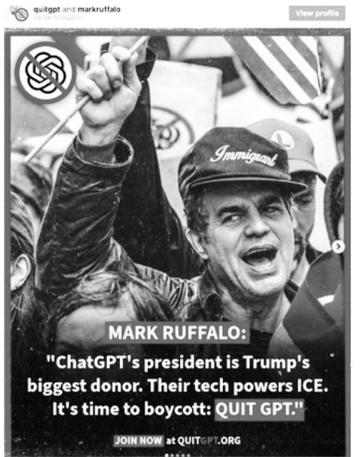
오픈AI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거액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최근 엑스와 인스타그램, 블루스카이 등 SNS를 중심으로 '쿼트GPT' 해시태그와 함께 챗GPT 구독 취소를 인증하거나 독려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quitgpt.org) 및 SNS를 통해 챗GPT 보이콧 참여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쿼트GPT 참여자들은 "우리는 오픈AI 경영진이 트럼프와 공화당, 거대기술기업 슈퍼팩에 후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할 때까지 보이콧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권위주의자들을 돕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할리우드 스타와 학계 유명인사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헐크 역으로 유명한 배우 마크 러팔로는 인스타그램에 "챗GPT의 사장은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이며 그들의 기술은 ICE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이제는 보이콧할 때다. 쿼트GPT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이



'쿼트GPT' 동참하는 배우 러팔로. /연합뉴스

는 4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200만 회의 '좋아요'를 받았다.

거대 기술기업의 폐해를 지적해온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베스트셀러 '휴먼 카인드'의 저자인 네덜란드 역사학자 퀴트허르 브레흐만, 배우이자 디지털 프로듀서인 브레이 클리 스타던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페루, 4개월 만에 또 대통령 교체...중국 유착 논란

호세 헤리 대통령 탄핵 당해

페루에서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로 4개월 전에 취임한 대통령이 중국인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을 받다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페루 국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임시 본회의에서 호세 헤리(39·사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페르난도 로스피글리오시 페루 국회의장(직무 대행)은 "다수 의원이 헤리의 직무 태만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라며 "의원들은 헤리에게 국가 정상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페루 국회는 18일에 새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7월 28일 임기 종료 때까지 헌법에 따라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페루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국회에서의 의결로 곧바로 대통령이 탄핵된다.

국회에서 헤리 축출을 추진한 이유로는 중국 사업자인 양즈화와의 유착 의혹이 결정적이었다.

TV방송 RPP와 일간 엘코메르시오 등 페루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출신 양즈화는 중국



수입품 상점을 운영하며 돈을 번 뒤 페루 에너지 산업 분야에 눈독을 들였다. 그의 회사는 2023년 2440만 달러(350억원 상당) 규모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오는 6월부터 상업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진척도 0%'를 보였다. /연합뉴스

현지 검찰은 헤리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2021~2025년)이었던 2024년 1월부터 이 중국인 사업가와 교류하면서 편의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헤리는 장즈화 접촉 과정에서 후디(모자 달린 옷)로 얼굴을 가린 채 중식당에 들어가는 등 스스로 논란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 언론은 이번 정치적 스캔들을 '치파게이트'(Chifagate)라고 부른다. 치파는 페루에서 현지화한 중국 음식 또는 페루 내 중식당을 통칭한다.

페루 검찰은 여기에 더해 헤리가 최소 9명의 여성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정부에 채용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